

광주 북구 ‘상반기 조직개편’ 형평성 논란

본청 대비 업무비중 적은 행정복지센터 증원 추진 “직무분석과 조직 진단 소홀, 편의주의” 문제 제기

광주 북구가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이 결여된 채 ‘상반기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첫 조직개편 당시 북구는 1개과와 2개 담당을 신설하고, 25명의 정원을 증원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각 동에 ‘주민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전체 증원 인력 25명 중 22명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다.

북구는 오는 6월 대단위 조직개편을

위해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정원 8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그 중 42.3%인 36명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목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은 “북구는 심도있는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 없이 증원 인력을 손쉽게 무난하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 주민생활불편 신고센터’ 월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흥 1, 2동, 운암 1동 등 한 개 동의 월간 처리건수가 10건에 되지 않는다.

또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초과

근무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인원 증원이 적은 본청 및 사업소의 개인별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센터는 오히려 2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아울러 지난 3년 사이 센터 정원은 73명이 증가했으나 본청 및 사업소의 전체 정원은 14명에 그쳤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북구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청 직원들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과중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무부서 안배 등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한 합리적 배치로 효율적 인력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나친 현장 중심의 행정 이 자칫 지원 부서에 대한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북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

께 발맞춰 가는 조직 운영이 돼야 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안은 행정복지센터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동에 배치된 생활불편 신고센터 담당 직원들의 업무 신고처리 건수만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규 행정수요 대응, 동 직원 1인당 인구수, 실태조사, 규모 분석 등을 통해 증원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배정한 인력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에 주민들이 있고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구민중심 행정 펼치기 위한 필요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인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은 북구 공무원의 32.1%를 차지한다. /최환준기자



장미향기에 취해보세요 ~ 20일 광주 동구 조선태내 장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형형색색의 그윽한 장미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장미원은 총면적 8천299㎡에 227종 1만7천94주의 다양한 장미가 식재돼 있다. /김예리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고졸 채용 우수기업 최고경영자와 대표, 관내 특성화고 학교장 등 36명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자문단으로 20일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4시 직업계고 고졸 채용 우수기업인 한국알프스 최고경영자와 ㈜유프랜드 대표, 광주주 동화설비공고를 포함한 관내 13개 특성화고 학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후 ㈜조인트리, ㈜상오정밀,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등 9개 기업과 ‘취업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의 교육과 취업은 기업, 지자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자문단 위촉 시교육청, 기업과 업무협약도 체결

제, 유관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취업지원 활성화와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자문단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고 취업활성화에 큰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달 30일 취업지원 담당자 워크숍에서 논의된 취업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 근로

중심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이행, 기업 신규 채용 시 회사기준에 의한 우수학생 채용,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학습중심 현장실습 가능 산업체 정보 제공, 우수 중소기업 및 양질의 취업처 지원, 직무역량강화 취업 지원 및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김종민기자

연구부정 의혹 특별감사 교육부, 전남대 등 15곳

교육대는 성폭력 관련 컨설팅

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연세대·전남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단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서울대·연세대·전남대를 포함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이들 학교는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 부정 의혹이 있는 교수들이 대거 적발된 곳들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교육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국 고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컨설팅을 받는다. /김종민기자

전남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본격화

도교육청, 1차 전수조사 교가·석물·생활규정 등 115건 확인

광주에 이어 전남지역에서도 각급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에 교가와 석물, 생활규정 등 친일잔재 11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기리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친일잔재를 청산기로 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역사 전공 대학교수, 역사·음악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으로 T/F를 구성해 지난달 1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5개 학교에서 친일음악가 작곡 교가(18곳), 일제 양식의 석물(33곳), 일제식 용어 생활규정(64곳) 등을 확인했다.

18개 학교 교가의 경우 계정식(1곳), 김동진(3곳), 김성태(11곳), 현제명(3곳) 등의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33개 학교의 석물은 일제 충훈탑과 공덕비 등을 모방한 것으로 나



전남도 학교 내에 설치된 친일잔재 교훈탑.

타났다.

또한, 64개 학교생활규정에도 ‘불량’, ‘불운’, ‘백지동맹’, ‘선동’, ‘불법집회’, ‘동맹휴학’ 등 일제식 용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백지동맹은 학생들이 시험에 서 답안을 적지 않고 백지를 제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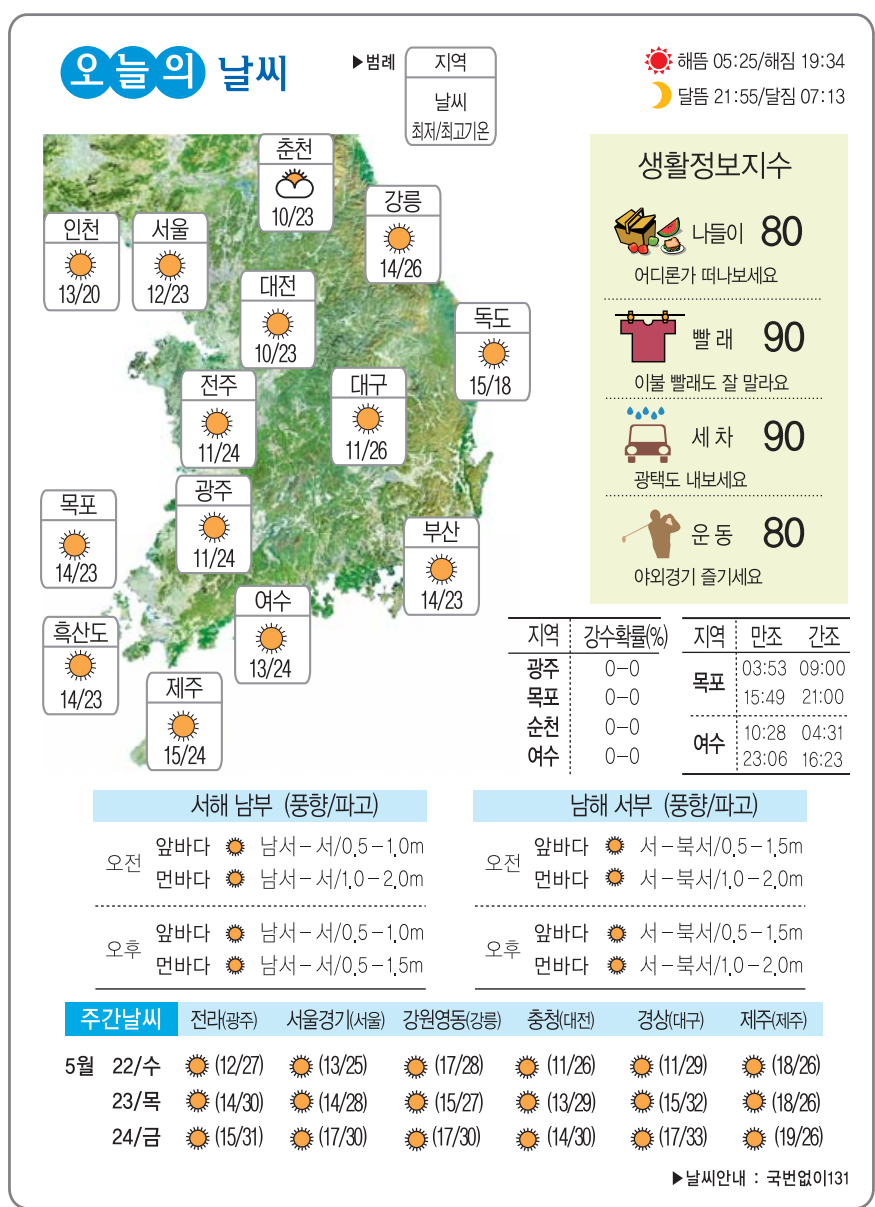
것으로 동맹휴학 등과 함께 항일 투쟁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학교 내 친일잔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본격적인 청산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친일 잔재조사 및 청산 TF팀’을 구성하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가와 교표, 교기, 교목 등 상징물은 물론 기념비나 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8월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설명회와 학교별 TF구성, 전문가그룹 판별작업, 예산교부, 철거 작업 등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 당국의 친일 잔재 청산작업은 지난 2016년 친일인사 김백일(일본식 이름 가네자와 도시미마·1917~1951)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백일초등학교의 교명을 성진초로 개명하면서 비롯됐으며, 전수조사나 다름없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김종민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

원자력안전위 “법 위반 가능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1호기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일 “지난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2분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김동규기자

남구, 오늘 2020학년도 대입 설명회 개최

광주 남구는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내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 학부모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남구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대비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가 열린다.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를 비롯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시전략 설명회에서는 수시 지

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이 분야 전문가인 이투스 김병진 교육평가연구소장을 초빙,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입시 정보 및 진학 상담,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지 신문사 2곳에서 입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과거 명문대 대학 입학학자 프록트 책임 컨설턴트로 활동한 김소장은 이날 약 100분 동안 강단에 올라 강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철현기자

김신혜 “위조 사문서 행사 검찰 체포돼야”

재심 첫 공판서 증거 부당성 주장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는 20일 재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회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나서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며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한 차례 휴정을 거쳐 2시간45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청약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류가 보험모집인 필제로만 작성된 정황, 보험사 사무실에서 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일시에 집 전화를 사용한 통화명세 등을 반

박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영화 ‘사일런트 폴’이 범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도 출처 등을 문제 삼았다.

김씨 측과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진행한 준비기일 과정에서도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두고 비슷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한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감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오송지기자